



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미국 연방법원은 대마불사 금융기관(SIFI)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인 MetLife의 손을 들어줌. 판결의 주요 논거는 SIFI 지정 근거의 부적절성과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 결여를 들고 있음. 이번 판결은 향후 우리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도입하는 데 반면교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¹⁾은 대형 보험그룹 MetLife Inc.(이하 'MetLife')에 대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이하 'FSOC'²⁾)의 대마불사 금융회사(이하 'SIFI'³⁾)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⁴⁾은 부실화로 인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는 권한을 FSOC에 부여함.
- FSO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MetLife 등 4개 비은행 금융그룹⁵⁾을 SIFIs로 지정한 바 있으며 MetLife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본고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크게 FSOC의 MetLife에 대한 SIFI 지정 근거와 지정과정의 정당성 관점으로 나누어 연방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고⁶⁾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 연방법원은 극단적 재무상황에서 보험그룹이 겪는 재무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FSOC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보험업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FSOC의 SIFI 지정이

1) Federal District Court for District of Columbia,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 관할 지방법원.

2)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3)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4)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5) 현재 보험그룹은 MetLife, Prudential, AIG 등이, 비은행비보험 금융그룹은 GECC가 SIFIs로 지정되어 있음.

6) 이번 판결내용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근거로 추론이 가능함.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지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보험은 장기에 걸쳐 있는 사업모형의 특성상 대규모 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낮아 전통적 보험영업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MetLife는 이러한 은행과 보험의 사업모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그룹에 대한 SIFI 지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2015년 1월 13일 소송을 제기하였음.

- FSOC는 사업모형 중 변액연금 등 비전통적 보험상품과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인 비보험 금융상품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으나⁷⁾ 결국 연방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함.

■ SIFI 지정 취소의 또 다른 근거로 MetLife는 FSOC의 SIFI 지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 FSOC가 SIFI 지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막아 MetLife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반론권을 자사의 SIFI 지정과정에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⁸⁾

– 도드프랭크법은 FSOC가 SIFI를 지정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와 소통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반론 및 자료 제공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SIFI 지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FSOC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음.⁹⁾

- 지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의 결여가 법원이 SIFI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주요 논거인 경우, SIFI로 지정된 다른 보험그룹이 SIFI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짐.¹⁰⁾

■ 미국 연방법원의 금번 SIFI 지정취소 판결은 시스템리스크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협요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줌.

- 또한 금융규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고 그 과정은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소송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kiri](#)

7) 이승준(2016. 2. 22), 「MetLife 분사계획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KiRi Weekly』, 제372호, pp. 3~5.

8) Wall Street Journal(2015. 1. 13), “MetLife Takes on the Feds”.

9) FSOC(2015. 2. 4), “Supplemental Procedures Relating to Nonbank Financial Determinations”.

10) New York Times(2016. 3. 30), “MetLife Wins Battle to Remove ‘Too Big to Fail’ Label”.